

# '3·1절 특사' 위안부·세월호 집회 참석자 검토

## 전남도, 주민 참여 '공동체 정원' 신청하세요

### 청와대 적극 검토 중...정치인 포함 여부는 확정 안돼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민생·경제사법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수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면대상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취,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

약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주병 충북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역시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전달되는 데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사면 대상의) 사건 자

료를 보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다"라며 "이 때문에 아직 명단이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1일 특별사면 발표를 목표로 한다면, 2월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율)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명단이 청와대로 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다만 한명속 전 국무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사면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해 법무부에서 전달받은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법무부로부터 사면 대상의 범위나 명단에 대해 전달받은 뒤 검토를 거쳐야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정해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지금로서는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할지, 아니면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청와대 등 여론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15억 지원 5곳 선정키로

숲 가꾸기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전남도가 민간정원 육성과 함께 지역 공동체 정원 조성에 나선다.

전남도는 쾌적한 생활 환경과 지역의 산림문화 공간 창출을 위해 생활 속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만들 지역 공동체정원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체 정원'은 지역 주민이 정원 만들기에서 가구까지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소규모 온실과 텃밭 등을 조성해 주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꾸미는 사업이다.

이번 공동체 정원 공모는 2020년 조성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에 관심 있는 공동체는 오는 22일까지 시·군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전남지역 공동체 조직으로 아파

트 부녀회·산인회 등 마을공동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등 학생 공동체, 복지시설·병원 등 복지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 산림조합 등이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모두 5곳을 선정해 각각 3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시·군 현장조사와 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공동체에 대해서는 사업 내실화와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정원 전문가 교육과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통해 고흥읍 호령리에 '솔솔숲 공동체 정원'을 조성했다. 올해는 나주의 나주초등학교와 금성원, 곡성 연반마을, 무안 청춘공동체 등 총 4곳에 9억 원을 들여 공동체 정원을 조성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육체노동 정년' 60→65세 대법 21일 최종 결론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을 태운 버스가 12일 동해선역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능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오는 21일 내린다. 55세였던 노동가능연령을 60세로 상향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9년 만에 상향 조정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모가 수형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8월 수형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는 수형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능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능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능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합뉴스

## 금강산서 '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올 첫 민간 교류 행사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이 12일 방북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다.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7대 종단 수장들과 시민단체, 양대 노총, 여성·청년·농민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꾸러진 대표단 213명을 비롯해 취재진과 지원인력 등 251명은 이날 오전 10시에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 특별한 메시지 없이 30여분간 걸친 출경수속을 밟은 뒤 대형버스 8대 편으로 오전 11시 2분 군사

분계선(MDL)을 넘어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3시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로 귀경할 예정이다.

연대모임 공동대표단은 남측에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희중 대주교 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홍길 민주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맡았다. 북측과 해외 측에서는 누가 대표를 맡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각계각층은 북측에 다양한 교류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안불교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계사 템플스테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자 공동학술회의와 학생 예술활동·스포츠 교류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북측 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에 '2019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개최와 업종별 교류방안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올해로 90주년을 맞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자료교환 및 공동조사를 북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국가균형발전 차원 예타 면제 사업 시행돼야"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비전회의)'에 참석,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물'이라는 일부 비판과 관련, "예타는 (지방으로선) '통곡의 벽', 즉 울고 울어도 못넘는 벽"이라며 "사회연대·공공투자 사업이야말로 지방

에 주는 선물 아니라, 아프고 힘든분에게 주는 '치방전'이다. 이것은 촉매다. (예타 면제 사업은)2, 3차로 이어져야 한다"며 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군산·전주에서 포항에 경조사가 있어도 거의 못간다. 목포에서 강릉도 가기 어렵다"면서 "예타는 경제수익성인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수익이 나오기 어렵고 제도 개선을 하지니 시간이 걸리는 현실이어서 추진한 것이 (예타면제 사업의)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이봉창 선서문' 문화재 된다

"나는 적성(赤誠)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교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봉창 의사 선서문'을 비롯해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이봉창 의사의 거자금 송금증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봉창(1901~1932)은 일본과 만주 등을 떠돌다 중국 상하이에서 백범 김구를 만난 뒤 1931년 12월 13일 안중근의 동생인 안공근 집에서 선서식을 하고 선서문에 서명했다. 며칠 뒤 중국을 떠나 일본에 들어간 그는 이듬해 1월 8일 도쿄에서 관병색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나, 거사는 실패로 끝났다. /연합뉴스

### 월드인 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부터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월드인 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입금계좌 광주은행 744-121-407184 장용환 지부장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글로벌에셋 강익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월드인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9-196호

###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동 일원
  - 사업규모 : 398,461㎡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2월 13일(수) ~ 2019년 3월 15일(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환경생태과,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2시
  - 개최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019년 3월 22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및 공고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환경생태과(☎062-960-8434),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7)	광주교육대학교(197)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li> <li>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li> <li>각 현명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li> <li>각급학교(방과후 교육) 강사 추천</li> <li>연수과정 중 국가공인한자급수(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li> </ul>	
수강료	₩ 360,000 (예금주: 광주예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 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문의	·문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명광) 010-3614-4160	·문의 : 062)520-4243 ·지도교수(선명광) 010-3614-4160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WWW.JWU.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WWW.GNUE.GNUE.EDU.KR http://www.gnue.ac.kr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